

##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

[시행 2022.05.19]

(제정) 2022-05-16 훈령 제 1242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 범위)** 이 지침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·직속기관·출장소·사업소·합의제행정기관 소속 공직자와 그에 파견된 공직자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)** ①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1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시 감사관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(소방서·소방학교·119특수대응단·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포함한다)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**제4조(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·기피 신청)**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(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해야 한다.

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.

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.

**제5조(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)**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.

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신고·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·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·점검해야 한다. 공직자는 직무관련자(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)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⑥ 제5항의 신청에 대한 조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

**제6조(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)** ① 영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업무 중 시가 사업의 제안자, 지정권자, 승인권자 및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정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·공람,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.

1. 사업명

2. 사업 지구의 지번(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한다)

3. 사업 시행 일정(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한다)

**제7조(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 및 조치)**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

**제8조(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)**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시장(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시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)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.

**제9조(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)** ① 공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고에 대한 조치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

**제10조(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)** 시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(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
**제11조(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)** 시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·용역·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
**제12조(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)**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**제13조(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)**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.

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조사·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**제14조(종결처리)**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(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**제15조(신고·신청의 기록·관리)**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·회피·기피·조치·점검·통보·고발·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·관리해야 한다.

**제16조(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)**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결과 통보를 받은 자에게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.

**제17조(교육)**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·관리해야 한다.

**제18조(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)**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에 따라 상담 내용을 기록·관리해야 한다.

**제19조(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·운영)** ① 시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(이하 "자문기구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, 자문기구의 구성원(이하 "구성원"이라 한다)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위촉된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, 관계인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
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.

**제20조(세부징계기준)** 영 제35조에 따른 세부징계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**부칙 <훈령 제1242호, 2022.5.16.>**

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